

전남 섬·바다 연계 ‘해양관광 405만시대’ 연다

도, 2030년까지 3조1553억원 투입...채류형 관광 정착 여수 복합해양 레저도시·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집중

전남도가 섬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 여건을 활용해 해양관광 405만 시대 개척에 나선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총 3조1553억원을 단계적으로 들여 해양관광객 405만명, 생활인구 7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남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 자원이지만 당일 관광 중심 구조인 탓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채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관광객 405만명, 생활인구 7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채류형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해 방문이 소

비로 이어지는 관광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 관광의 진입장벽인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일반인 여행선 발급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모바일 플랫폼과 수요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는 섬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도 탐방 인프라와 요트 기반 아일랜드 호핑투어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분야에서는 전남 해양관광 통합 브랜드를 구축

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남 해양관광의 국제적 인지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해양관광도로 연계 거점 조성 분야에서는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영광 백수해안, 해남 목포구등대 등 선셋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연륙·연도교와 연계한 웰니스 섬 관광벨트를 구축해 권역 간 연계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바다와 섬은 전남의 가장 큰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다”며 “이번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을 자질 없이 준비해 전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해양관광 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광주 서구, 자원봉사센터 정기총회 23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서구자원봉사센터 정기총회'에서 김기강 서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평문화도시사업 '5년 연장 건의' 긍정 답변 국회서 민형배 측구에 최취영 장관 "적극 고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핵심 문화 동력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연장에 정신희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해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법안 대체토론에 나선 민 의원은 “사업 심의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태러”라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3년 8개월 만의 위원장 임명 등 묵은 과제가 해결된 만큼,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지체 없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저조한 국비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획 대비 국비 투입이 32%에 불과하다”며 “계획 수립 시한인 2028년까지 남은 2년 동안 9382억원에 달하는 나머지 70% 예산을 다 집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가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문체부 장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이 예산 당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자,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기술과 문화가 결합하는 도시, 산업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산업을 확장하는 도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고용위기 지역 ‘맞춤형 일자리’ 본격 지원

여주시·광주 광산구 등 전국 4곳에 총 180억

전남 여주시, 광주 광산구 등 지난해 정 부로부터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일자리 사업 지원이 본격화 된다.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을 상대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

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방자치 단체들과 협의해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

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4개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고, 전남 60억원·충남 40억원·경북 60억원·광주 20억원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 주력산업 및 연관 산업의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금, 종사자 주거·건강·교통비 등 생계비 지원이다.

전남과 충남은 지원 범위를 일용직 노동자와 화물 운수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

획이며, 경북의 경우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울산 남구와 전남 광양시에 대해서도 이르면 시일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과 예산액을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 우려 지역이 스스로 찾아낸 ‘사각지대’를 정부가 함께 메워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지역이 설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 내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는 사람’ 한분 한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에 임호근씨 내정 국민안전비서관에 이종원...안전비서관은 신설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으로 임호근 보 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임 비서관은 광주제일고·서강대를 졸업하고 199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정통 공무 역이다. 2021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임 비서관의 내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인구정책비서관 직책도 공식 상태를 벗어났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 비서관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 대를 7기로 졸업한 뒤 서울 광진경찰서장·송파경찰서장, 경찰청 자치경찰 기획팀장,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 등을 역임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경찰과 관련된 치안 및 안전 업무를 다룬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5·18헌법전문'서 계속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 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과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맞물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 열릴 개헌에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등 전국 23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날 국민결의대회에서 정치권에 개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교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이 담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대회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으로 나아가갈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역명, 시민이 짓는다

광주시, 3월 2~15일 2주간 역명 공모...6월 최종 고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8개 역의 명칭을 시민 손으로 짓는다.

광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역명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민 누구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는(ON)’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역사 반경 500m 이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거주지 인근 정거장 역명에 대한 의견을 오프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은 2호선 1단계 18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오프라인 설문은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된다. 설문은 광주시가 제시한 역별로 3개의 역명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의견 수렴 대상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20개 역 중 1호선 환승역인 203정거장(상무역), 214정거장(남광주역)을 제외한 18개 역이다.

광주시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자치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 전광판 및 빔프로젝TV, 광주교통공사 역사 내 게시판,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자치구 지명위원회와 광주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립국어원에 로마자·한자 표기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6월 중 최종 역명을 확정·고시한다.

문점환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역명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중요한 이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전남도는 오는 26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기념하여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이런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친족은 물론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전해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접수는 진화위와 전남도,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화위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